

주간 이슈 리포트

75 호

2005년 4월 셋째주(4/18 ~ 23)

◎ 주요내용

- | | |
|------------|--------------------------|
| - 세상돋보기: | 일본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 중국과는 달라야 |
| - 노동자 세상: | ‘김대환-이목화’ 변절인가 욕망인가 |
| - 통신정책: | 통신사업자들 “답답하다” |
| - 정자동 6층에서 | 청와대, 또 문제없다고 하는가 |
| - 만화방 | 시사만화 |



일본 대하는 우리의 방식, 중국과는 달라야

[고태진 칼럼] 중국의 반일 시위를 보며

요즘 연일 중국의 반일시위로 인해 떠들썩하다. 16일 상하이 등에서 10만 명의 중국인들이 벌인 반일시위가 17일에는 전 중국으로 확산됐다고 한다. 반일 시위에 대해 일본은 중국에게 사과하고 파손행위에 대해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의 태도가 원인이라고 맞받아 치고 있다.

중국의 반일시위를 지켜보는 우리의 태도는 일면 통쾌하면서도 또한 착잡한 것이 사실이다.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의 태도를 누구보다도 규탄하고 싶은 우리로서는 반일을 외치는 중국인들의 시위가 언뜻 통쾌하게 생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숙명적으로 두 나라의 틈바구니에 끼어 고통을 당해온 역사를 생각해보면 두 나라의 충돌이 자칫 우리나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통쾌하면서도 착잡한 중국의 반일 시위

중국의 반일 시위는 일본의 역사왜곡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우군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동북공정'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떠올리면 꼭 그리 생각되어지지도 않게 된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오로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실 우리는 민족까지 쪼개진 채로 양쪽의 거인들을 상대로 우리 역사를 지키고 앞날을 헤쳐나가야 할 막중한 과업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반일 시위가 점차 대형화되면서 과격화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영사관에 오물이나 페인트를 투척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수의 사례이긴 하지만 일본 음식점과 상점을 일부 파손하기도 하고 일본제 승용차를 부수기도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일제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도 본격화되는 모양이다.

나는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를 엄중히 규탄하는 것은 물론 당연하지만 이런 식의 과격한 감정적 표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자칫 문제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사고와 토론 대신 서로간의 감정적 대립만 증폭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중국의 반일 시위에 자극 받은 극우 세력의 반중국 행위가 일부 시작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정작 일본에 대해 더 많이 분노하고 규탄해야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태도는 지극히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보인다. 물론 단지를 해서 혈서를 쓰고 일부 북과 공작원 단체가 엽총과 불화살까지 동원한 극렬한 시위를 벌이고 일본의 독도 망언에 항의해 분신했다가 사망에 이른 경우도 있었지만 극히 일부의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빨리 끊는 냄비는 금방 식기가 쉽다. 과거 '냄비 근성'이라고 비하된 그 표현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냄비'를 벗어던진 적이 오래인 것 같다. 또한 우리는 질서정연하고 평화롭게 우리의 의사와 요구를 표현하고 주장하는 법을 실천해온 것이 이미 오래다.

월드컵 응원에서 우리 축구가 4강까지 올라가는 그 흥분과 감격의 도가니에서도 질서와 청결을 지켰고, 미군의 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을 추모하고 미국의 사과를 요구하는 격앙된 집회에서도 평화와 질서를 유지했으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장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된 광장에서조차 흥겹고 평화롭고 질서정연하게 '촛불의 힘'을 보여 주었다. 훌륭한 우리 국민들은 이제껏 '냄비'가 아닌 '뚝배기'의 저력을 보여왔다.

우리가 일본 대하는 방식, 중국과는 달라야

이제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침탈 야욕에 대해 은근하고도 끈질긴 '촛불의 힘'을 보여 줄 때이다. 우리 국민들은 폭력이나 극렬한 방식의 시위가 아니라도 우리 국민의 분노와 요구를 표현할 방법을 알고 있다. 우리가 일본을 대하는 방식은 중국과는 달라야 한다.

이미 이 세계화의 시대에 우리가 이웃인 일본과 관계를 단절하고는 살 수가 없다. 일제 상품을 구별해서 불매 운동을 벌이는 것도 무의미하기 짝이 없다. 삼성 휴대폰에 일본의 핵심 부품이 들어가 있는 시대이다. 또한 한류를 사랑하는 일본의 대다수 보통 국민을 감정적으로 배척해서도 곤란하다.

일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촉구하고 논리적으로 대화해야 한다. 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곡이나 독도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아예 넘보지 못하게 확고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자신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추고 민족 정기를 배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촛불을 높이 들 때이다. 평화적이면서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근하고 끈기있게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고 우리를 감히 넘보지 못하게 확고한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여줄 때이다.

‘김대환-이목희’ 변절인가 욕망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정부가 비정규직 법률안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등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정부의 비정규직 법률안으로는 이미 과반수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규모를 축소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권고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한 재계의 반응은 그렇다할지라도 인권위를 무지한 기관으로 치부해버린 김대환 장관과 이목희의원에 대한 기대는 저버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기대라기보다는 정부기관으로서 재계에 편향되지 않기만을 바랬지만 이제는 점점 노골적으로 나오는 저들에게 분노를 느낀다.

[손석춘 칼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통찰이다. 이른바 민주화시대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했다. 권력의 핵심부에 술하게 포진되어 있다. 신문기자 생활을 한 탓이다. 알고 지내던 사람들 가운데 '자리'에 오른 이들이 갈수록 늘어난다. 모두는 아니지만 공통점이 있다. 언젠가도 지적했듯이 '오만'이다. 그들 대다수는 마치 저 자신이 잘나서 그 자리에 있다고 '확신'한다. 애정 어린 비판에 대해서도 적대시하기 일쑤다. 힘을 모아 자기 자리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진지하게 풀어가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되레 권위의식으로 푹푹 뭉쳐있다.

권위의식으로 가득한 저 옛날의 '민주인사'들

보라. 노동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을. 김대환과 이목희. 한 때는 진보인사로 꼽히던 인물들이다. 하지만 장관과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 오른 두 사람은 오늘 어떤가. 진보적인가. 아니다. 차라리 한나라당보다 못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한 정부법안이 문제가 많다는 의견을 표명하자 살천스레 비난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오마이뉴스>가 주최한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잘 모르면 용감해진다"며 국가인권위를 겨냥해 "단세포적인 기준"이라거나 "부적절하고 잘못된 많은 의견 가운데 하나"라고

몰아세웠다. 이목희 의원도 마찬가지다. "인권위 의견은 황당하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무지의 소치'라고 비난했다.

더구나 김 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에는 노동문제 전문가가 없다고 주장했다. 묻고싶다. 과연 경제학자 김대환은 얼마나 노동문제에 전문가인가. 한국노사관계학회와 한국노동경제학회 그리고 한국노동법학회가 공동으로 연 토론회에서 정부법안의 문제점이 조목조목 비판받은 사실을 학자 김대환은 알고 있는가. 전문가라면 장관인 자신보다 노동관련 학회가 더 전문성 있지 않은가.

물론, 전문성의 문제는 여기서 사소하다. 문제의 핵심은 김 장관의 발언에서 묻어나는 '편협한 오만'이다. 그는 "인권위의 의견제시는 노동시장 선진화로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난 돌부리"라며 "대로변의 돌부리는 파내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바쁘니까 그냥 가겠다"고 말했다. 과시즘의 냄새가 물씬 묻어난다.

그 뿐인가. 그는 대한상의 회원기업 최고경영자와 임원들이 참석한 조찬간담회에서 "경영계는 대기업의 노동 경직성의 원인을 법·제도로 돌리고 있으나 경직성의 더 큰 원인은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에서 기인한다"며 "사용자들도 사용자 안전을 내서 노조와 적극적으로 교섭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죽번죽 강조했다.

사용자와 밥 먹으며 노조에 강경대응 부추기는 노동부장관

그래서다. 과연 그는 자기 자리를 노동부장관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경제부총리로 여기는가. 바로 그런 처신 때문에 학계 일각에서 그가 경제부총리를 노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차분히 훑아보자. 대한상의 회원기업 최고경영자와 임원들을 만나 노조에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노동부 장관, 참으로 가관 아닌가.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은 '뿔아야 할 돌부리'란다. 이목희 의원이 국가경영을 들먹이는 모습도 김 장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다. '진보학자'나 '노동운동가'로 불리던 두 사람의 오늘 모습은 무엇일까. 변절일까. 그것이 아니라면 '출세'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진보학자 행세를 하고 노동운동을 벌인 걸까.

어느 쪽이든 두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호소하고 싶다.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나라. 더 큰 자리를 꿈꾼다면, 그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죄악이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기 전에 물러나길, 하여 진보학자와 노동운동가라는 한때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지키길 충심으로 권한다.



통신사업자들 “답답하다”

당초 이달 중순께로 알려진 KT 등 통신사업자 담합(카르텔)으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내달로 연기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6개 유선통신사의 담합 관련 조사를 이미 마쳤으나 통신사 담합 안건 외에 올라온 안건이 많고 한꺼번에 많은 안건을 올릴 수가 없어 전원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말할 수 없으나 이달 안에 열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11일 말했다.

통신사업자의 담합 이슈 외에 진로 매각에 따른 독과점 판단이나 롯데그룹의 부당 내부자 거래 등 시장 흐름을 좌우할 공정위의 결과 발표가 남아 있어 업계에서는 내달 11일이나 18일쯤 통신사업자 담합 관련 전원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와 통신위가 통신사업자에 이중규제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상 최대의 과징금 부과를 앞둔 관련 업체들의 입장을 전자신문을 통해 알아본다.

KT와 하나로텔레콤도 아직 공정위에 ‘시내전화 담합’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KT와 하나로텔레콤은 소명을 통해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과정에서 정부 부처의 행정지도에 의해 요금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할인 혜택이 큰 융합형 번들상품을 내놓고 있어 담합으로 인한 이용자들이 본 손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업자, 과징금 낮출 수 있을까=최대 관심사는 역시 과징금 규모다.

공정위는 “일부 언론에서 거론한 1000억원대, 사상 최대 등의 언급은 추측일 뿐”이라며 “심판관들의 판단과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어떻게 합의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담합이 이뤄진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담합으로 인한 매출은 얼마로 추정할지 △담합의 5%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지만 이대로 적용할 것인지를 과징금 규모의 관건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경쟁국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에서는 과징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 경쟁국 관계자는 “유선통신사업자 과징금 결정과 관련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소신껏 적용한다는 원칙만 확정됐을 뿐 나머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어디까지 원칙을 적용할지, 통신사업자의 소명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 과징금이 알려진 규모보다 다소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T와 하나로의 소명은 제각각=KT와 하나로텔레콤은 여전히 극도로 조심스러운 반응이지만 공정위에 제출할 소명서의 방향은 다르게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담합 사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인정하지만 KT는 정통부의 요금 정책 가이드라인 제시와 PSTN 적자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하고, 하나로텔레콤은 정통부 정책 보다는 KT 대응 전략이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소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면 액수에 따라 ‘행정소송’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양사 모두 “행정소송 등의 조치는 과징금 판결 이후에나 검토할만한 사안으로 지금은 전혀 준비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반응과 전망=“시장 정상화를 위한 행정지도와 담합은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진대제 장관의 최근 언급처럼 사실상 통신사업자 잘못으로 떠넘긴 정통부의 후퇴한 반응이 과징금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게 문제다.

한 이통사업자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가 유선업체뿐만 아니라 이통업체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통부가 이러한 태도로 나간다면 이후 파장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유효경쟁정책과 클린마케팅 지도 등 통신시장 특수성에 대해 더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아쉬워했다.

조사 대상업체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아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 같은 식이라면 정통부의 향후 정책에 힘이 실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또 문제가 없다고 하는가?

[고승우 칼럼] 홍석현 주미대사 부동산문제를 보고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문제로 연이어 낙마하더니 이번에는 홍석현 주미대사가 도마에 올랐다. 부동산 구입과 위장전입 등이 문제가 된 것이다. 청와대에서 하는 말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연초부터 지겹게 되풀이되는 ‘홀러간 3류 영화 스토리’다. 화나고 실망스럽다.

공직자들의 돈과 관련된 도덕성 문제가 간단치 않은 이유는 자명하다. 우선 우리 경제가 어수선하다. 수출은 잘 되지만 내수 부분이 잘 풀리지 않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다는데, 신용불량자가 아직도 수백만이 넘을 정도로 밀바닥 경제는 엉망이다. 돈 한 푼이 아쉬워 피눈물을 쏟는 사람이 널려 있다.

그런데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축재를 보는 청와대와 시민사회의 시각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 그들의 행태는 실정법을 어겨서, 자칫 법망에 걸릴 만도 한데 청와대 등 관가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한다. 그런가 하면 재경부 같은 데서는 부동산 투기는 뿌리를 뽑겠다는 으름장을 내놓고 있다. 과거의 비행은 괜찮고 현재나 미래의 비행만 때려잡는다? 이건 상식적인 법 감정에도 거슬린다.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청와대의 눈높이가 시민사회의 그것과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사회여론이 들끓는다. 좀 더 엄격한 공직자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여론은 간다. 그런데 청와대 인사담당 비서관은 볼멘소리를 한다. 50대 이상의 연령층 가운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사가 거의 없는데 여론이 너무 한다는 식이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공직자의 윤리 의식에 대한 심각성이 짙어지면 여론은 공직자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간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공직자들의 변명은 거의 동일하다. 자신은 몰랐는데 아내나 처제, 부모, 장인 장모가 저질렀다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결백을 강조한다. 언론은 그 발언의 진위에 대해 사후 검증하는 일은 거의 없다. 문제의 공직자가 물러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언론의 탐사 보도는 더 이상 진척되지 않는다. 정부 말대로 정부에서 진위를 가린다니 그 때 발표를 받아쓰려고 그러는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에 대한 법률적 확인시스템은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검증 요구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사회가 너무 앞서 나간 것인가, 아니면 권력 쪽이 뒤로 후퇴한 것인가? 이 정부가 시스템 인사를 그토록 강조했는데 시스템이 무용지물이라고 강변한다면 보통 일이 아니다. 거기엔 자의적 판단에 따른 독선만 남는가? 그러면 개혁은 어디로 가는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고위공직자, 공작털을 쫓고 있는 까마귀인가

고위공직자들의 어처구니없는 처신에서 끝없는 사람의 욕심이 드러난다. 공직자 검증 시스템으로 많은 사람이 큰 망신을 하는 것을 모두가 목격했다. 공작인가 했더니 공작 털을 쫓고 있는 까마귀였다. 높은 자리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계속 공작 흉내를 내고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권력에 대한 무서운 집착은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지 모른다는 걱정과 두려움조차 물리치는가 보다.

검증 도마에 오르면 자신의 거짓 깃털도 뽑히고, 구린내가 나지 않도록 발랐던 향수도 씻겨 내려간다. 별거승이가 되어 강렬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면 외친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자신은 까맣게 몰랐는데 아내가, 부모가, 장모가 그렇게 했다고 큰 소리로 외친다. 그들의 말은 아마도 진실인 모양이다. 모든 언론이 그들의 말을, 부모와 아내를 욕보이는 그런 말을 대문짝만하게 보도해도 말썽 나는 일이 없으니 말이다. 고위공직자의 폭로성 자기 고백으로 가정불화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아직 들리지 않는다.

그들의 말이 진실이라면 일부 가정의 대화 부족은 정말 심각한 지경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잘 나가는 집안의 식구들은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식으로 비밀이 많은 모양이다. 아니면 관리할 재산이 너무 많아서 사소한 돈 덩어리는 입에 오르지 못하는가? 하여튼 한 달 봉급을 이리저리 쪼개면서 잔돈 몇 푼에 집착하는 일반 가정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보통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정상적인 가정적 배경을 지닌 공직자가 어떻게 국정을 할지 의문이다. 물론 본인들의 변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드릴 경우에만 해당 하는 말이다.

개발 독재 시절 잘 나간 사람만을 고르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 그 때 큰 고생을 한 사람들 가운데 돈 문제로 가족 간에 범죄성 비밀이 엄수되거나 침묵으로 대신되는 그런 가정을 지닌 사람은 흔치 않다.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런 사람들은 고위 공직대상에 아예 오를 수가 없는가? 시대 상황을 외면하거나 거기에 편승해서 전문성과 부를 쌓은 인사들이 선호되는 한 공직자의 청렴성을 둘러싼 여론은 쉬 가라앉지 않을 듯하다. 고개 숙인 공직자들이 더 이상 뉴스 메이커로 등장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공직자 검증 시스템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조차 짜증을 내는 것을 보면 불안하다. 혹시 그런 검증 시스템이 개악되지 않을까 해서다. 개혁성에 시민사회가 앞선 것일까? 윤리는 윤리 차원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논리에서 시민사회의 청렴성 요구에 귀를 막아 버리면 곤란하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개혁이 화두라는 현실을 직시하자. 우리나라도 이제 웬만큼 법치가 자리를 잡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오늘 잘못된 것은 어제에도 마찬가지다. 잘 나가는 사람이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지나치다든가 여론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제발 고만 나왔으면 좋겠다.

만

화

방



□ 21세기 매국노 - 완결편

• 그들의 멋드러진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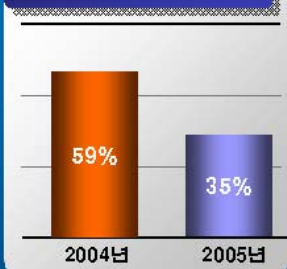
- 일본제국 "나라도 없는 조선인의 말이 왜 필요한가?" - 국어말살정책
- 조선일보 "사실 주요단어 한자로 씁니다" - 맛있는 한자 4월호 팝니다
- 서울시 "서울시 공무원 올해부터 영어면접시험 본다" - 윤리 보다 중요

괴롭혀도 너무 괴롭힌다

• 국내 출판사별 국어사전 최근판 현황



• 고3 수험생 국사 선택 비율



• 목표설명 영어 하나만 잘하면 대접 받는 나라에서, 국어보다 남의 나라말이 더 중요한 나라에서 "국사교육 강화" ??, "국어사전 출판" ?? 어렵없는 소리다.

• 참고문헌 조선일보, "사실 주요단어 한자로 씁니다", 2005.4.14, 사고 국민일보, "국어대사전 개정 위해 '신조어' 실종", 2005-1.30, 강주화기자 YTN, "서울시 공무원시험에 영어면접 도입", 2005-4-6, 이병석 기자

